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의 현황과 과제

지방의정연구센터 소장 **고경훈**

1. 주제의 쟁점 및 필요성

1 문제 제기

-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등 지방행정환경이 다양화·복잡화되면서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권한 및 역할 확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1.1.12.)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권한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지방의회의 확대된 권한·역할에 상응하는 지방의원의 의정비제도를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주제의 필요성

-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에 따라 이에 적합한 수준의 의회 역량 확보를 위한 적정 의정비 체계의 검토 필요
- 유급제 도입 이후 개정 지방자치법(2005. 8. 4. 일부개정, 법률 제7670호)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매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결정할 때마다 의정비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차이로 인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져 2008년 행정안전부에 의해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 라인이 제시됨

3 주제의 주요 쟁점 사항

- 의정비 계산식은 복잡한 회귀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 입장에서 이해가 어렵고, 획일화되어 있는 계산식으로 인해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 때문에 월정수당 방식을 자율화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은 아직도 의정비를 둘러싼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II. 의정비 결정의 현황과 문제점

1 의정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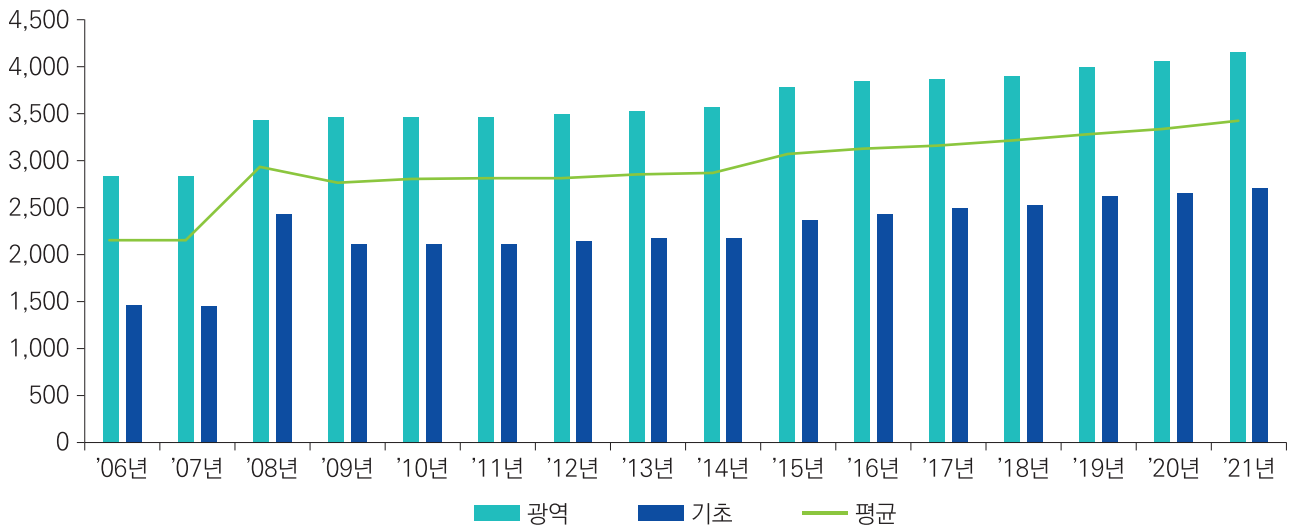
- 2006년 이후 21년까지 15년 동안 월정수당은 연평균 3.1% 증가하였고 광역의회 월정수당은 2.5% 증가, 기초의회 월정수당은 4.3% 증가
- 2007년 대비 2008년에는 36.3%의 증가 있었고, 2008년 대비 2009년에는 5.3%의 감소가 있었으며 이후 매년 평균 1% 후반대의 증가세를 보임

〈표〉 연도별 월정수당 변화 내역

(단위 : 만 원, %)

구분	'06년	'10년	'14년	'16년	'18년	'20년	'21년	증감률
광역	2,884	3,503	3,589	3,872	3,943	4,090	4,182	2.5%
기초	1,468	2,124	2,199	2,447	2,538	2,676	2,742	4.3%
평균	2,176	2,814	2,894	3,160	3,241	3,383	3,462	3.1%

〈그림〉 연도별 월정수당 변화



2 의정비 결정의 문제점

- 일반적으로 자치단체별 인구나 재정자립도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의정 활동 실적과 연계된 분석이 필요함. 즉 의정활동비와 의원의 전문성, 성과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의회 의정비 현실화를 위한 고려사항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들의 월정수당 결정에 있어서 의정비심의원위원회에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보다는 포괄적으로 권고사항(예를 들면, 지역의 재정수준, 행정수요, 유형, 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등)만을 제시함. 따라서 의정비심의원위원회가 그러한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확실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을 어겼을 때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고경훈·이상목, 2008)

- 월정수당 산정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권고 기준에도 지역마다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것도 있으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같이 기준이 모호한 것도 있어서 이러한 모호한 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즉, 월정수당 산정에 있어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고경훈, 2012)
- 현재는 의정비 책정의 객관적 기준 설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으며 예를 들어 자치단체의 부단체장급이나 국장급 등을 기준으로 삼아 주민의 반응을 참조하여 결정하거나 주변 자치단체의 결정에 영향을 받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월정수당비 산정 기준을 요구하는 여론도 있음(고경훈, 2012)



Ⅲ. 의정비 제도개선의 대안

- 어느 수준이 적절한 의정비인지에 관한 판단은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기대어 도출되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따라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의정환경과 행정수요 증가 등의 상황을 반영한 직무 분석 등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의정비 지급제도와 적정 의정비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됨
- 즉,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의정비와 의정활동 성과 간에 대한 분석 또는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에 투입되는 업무량 및 직무 수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함
- 지방의원의 개별적 업무량 측정 기준으로는 먼저 지방의원의 업무성격에 따라서 지방의원직의 수행 업무를 사전에 규정해야 함

내용문의 고경훈(지방의정연구센터 소장, kukkh@krila.re.kr)

